野 '4·27 연대' 타협 진통 또 진통

시민단체, 김해 을 등 중재안 제시… 민주·참여 부정적

"야3당, 순천 시민경선 후보 결정하되 강원·분당 배려"

4·27 재보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의 선거연대 협상이 시한(20일)을 넘기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야 4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20일 밤까지 연대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민주당은 김해을 단일후보 선정 방식을 놓고 유권자 직접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국민참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각각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한국진보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4당에 야권연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중재안은 순천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 3당이 다음달 3일까지 시민단체와 협의해 시민배심경선을 통해 야권연합 단일후보를 선정하고 대신 야 3당은 민주당을 위해 강원도지사·경기 분당을 지역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지사 선거엔 배연길 민노당 예비후보가, 경기 분당을 선거엔 이종웅 국민참여당 예비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팽팽하게 줄다리기하고 있는 경남 김해을의 경우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결선 후보 2명을 뽑고, 다음달 3일까지 국민참여경선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중재안을 22일까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는 정당 정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며, 국민참여당은 "국민경선은 '조직동원 선거'를 낳을 수 있다"며 각각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재안 답변 시한을 지나면 야 4당들은 지역별 막판 단일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후보 배출에 사활을 건 각 정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대표, 盧 묘소 참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에만 '석패율제' 도입되나

선관위, 법 개정 의견 내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해 영남과 호남 지역에 한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석패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구상 중인 방안은 지역구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당선시키는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면 각 정당이 전략권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석패율제를 운용하는 일본과는 달리, 석패율제를 영남과 호남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호남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후보와 영남에서 당선하는 민주당 후보는 각기 3~4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해 당선시킴으로써 지역기반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찬 '응석' 안돼"

홍준표, 영입 반대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1일 정운찬 전 총리가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 끝에 동반성장위원장직 사퇴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 "(정 위원장의)응석을 받아주면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 전 총리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스스로 잘못 설정한 개념과 전쟁 중으로, 이를 청와대·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총리를 지낸 어른의 행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여권 일각에서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4·27 재보선의 '성남 분당을 정운찬 투입론'에 대해 "정 전 총리를 꽃가마 태워서 모셔올 의사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홍 최고위원은 정 전 총리 측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데 대해 "국정원이 미행을 하는 듯 얘기했는데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나"며 "미행하려면 미행 가치가 있어야 하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 전 총리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초과이익 공유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분당을 보선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나설 경우 정 전 총리가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시각을 염두에 둔 듯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라며 "말을 아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학규-유시민 盧心 쟁탈 '봉하대첩'

야권 단일후보 싸고 양보없는 일전 전개

민주 곽진업 후보 선출

야권의 유력 차기주자인 민주당 손학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첫 번째 관문인 4·27 김해 을 재보선을 놓고 정면대결을 펼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이곳에서의 야권 단일후보를 둘러싼 승부는 두 사람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양보 없는 일전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손 대표에게 김해 을은 향후 대권가도에서 영남의 교두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다 친노 진영을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그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민주당 깃발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김해를 방문, 경선에서 승리한 곽진업 후보와 함께 바닥을 훑으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김해 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곽진업 예비후보는 51.5%의 득표율로, 47.5%를 얻은 박영진 예비후보를 가까스로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은 부산 출신 친노인사인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영남 출신의 김영춘 최고위원, 당 '영남미래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을 김해 선대위원장으로 배치, 유 대표의 친노 바람몰이 시도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

지난 19일 전당대회에서 새 간판으로 선출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각계인사 예방 일정을 마치는대로 24일 김해로 내려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재보선 때까지 상주할 예정이다.

유 대표 입장에선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원내정당 진입 여부를 가르는 가늠자이자 친노 그룹 내부에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첫 시험대이다.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의 중도하차를 놓고 친노 일각에서 유시민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패한다면 야권 내에서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사무국장의 불출마에 대해 "우리는 (출마를) 봉쇄한 적이 없다"면서 이 전 지사의 손 대표 지지발언과 관련해선 "정치인의 선택으로 마땅히 존중하나 날 지지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기업·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

선관위, 법 개정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조만간 낼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기업과 단체는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300만원이 넘으면 인터넷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 부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중앙당은 연간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 때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는 이중국적자를 가려내려면 해외 공관에서 서류를 접수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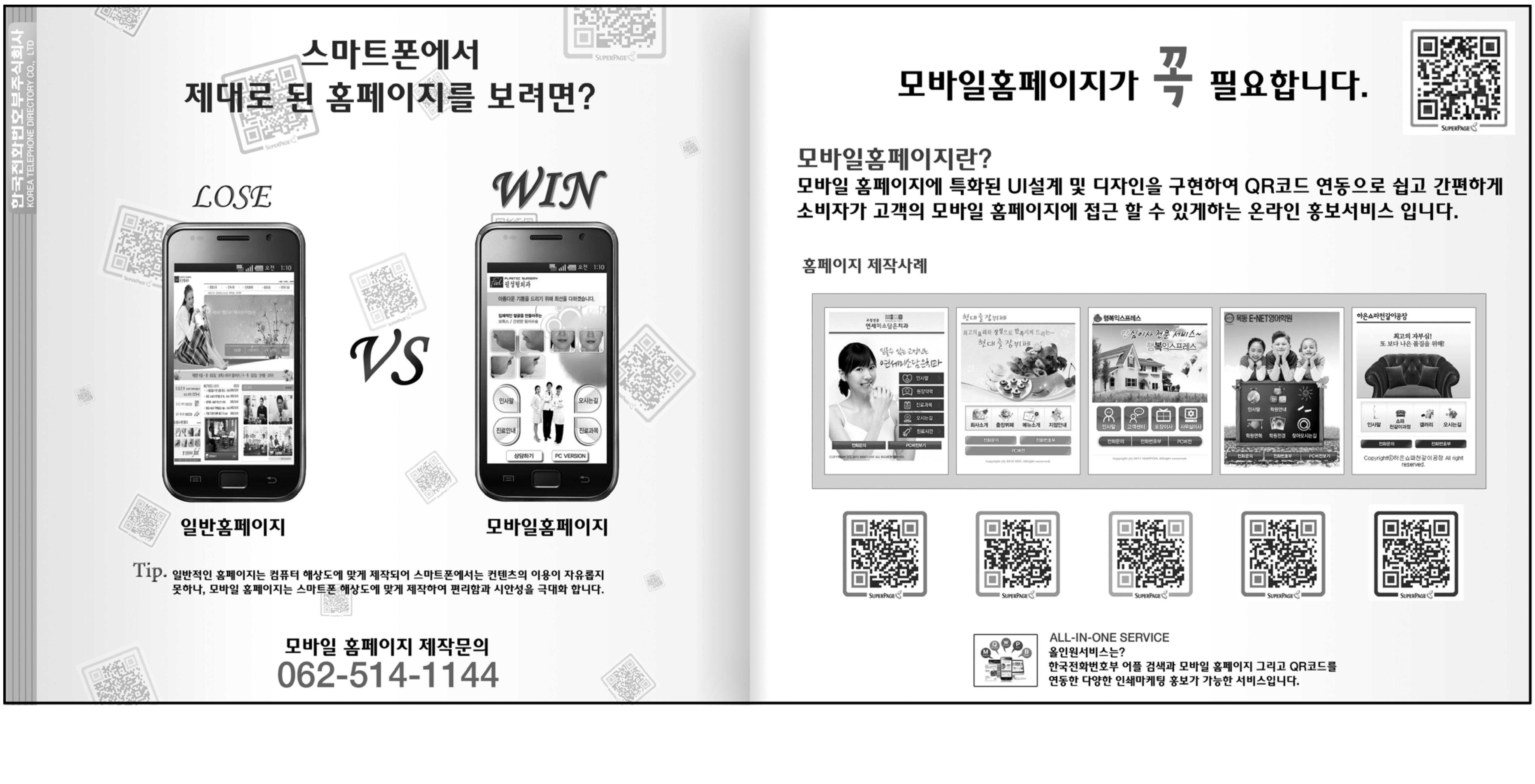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 보선 조재환 민주 예비후보 첫 사퇴

민주당이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결정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첫 사퇴자가 나왔다.

조재환(62) 전 민주당 의원은 2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결정에 승복,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4·27 보선에서 사실상 순천을 무공천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이 같은 지도부의 독단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당의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조 전 의원의 사퇴로 예비후보 등록자는 김 전 의원과 허 전 장관을 비롯한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상철(51·경기대 교수), 안세찬(49·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 특보), 구희승(48·변호사), 허신행(68·전 농림부 장관), 김영득(51·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노동당 김선동(43) 후보 등 9명으로 줄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